

한동훈, 연이은李 때리기... '배신자 프레임' 탈피 급급

저서·SNS에李겨냥 비판 게재
보수지지층에 “미안하고 고맙다”
당내경선 통과 위한 당심 공략

민주당 “韓,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물
인기 영합주의자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탄핵안) 가결이 이뤄지도록 조력해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시스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적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적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 전한길 강

사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측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민주당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도 위협했다.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 머물게 도운 것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는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힘 경선 규칙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5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민심을 잡더라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직무 정지

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에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임에도 찬성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가결됐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 극렬 지지층은 당원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찬성한 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는 방법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인데 어떻게 보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슈 주도권 장악한李... 발언 때마다 與野 '꿈틀'

與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비판
野 비주류 인사들도李에 민감 반응
어떤 반응에도李 화제성 얻어 이득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부산신항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

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블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쫓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

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를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예진 기자

李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 앞장서야... 당 차원에서 지지할 것”

박형준 시장 “글로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 언급 없어... 실망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PK)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동진(東進)’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

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처했고 거기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 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북극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바다 출발점, 육로 출발점,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트라이포드가 완성되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

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북극항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민주당에 당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

항로 개척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희는 글로벌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민주당도,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은 부산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글로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시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에 대해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부산 시장께서는 차제에 이런저런 지역 현안에 대해 그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들어 상당히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